

- 녹취록 -

프랑스지방선거 경험과 2010지방선거 준비

발표·진행 : 박미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 사무처장 전 경기도의원

토론 : 황희준 민주노동당 서울시 구로구위원회 당원

김대성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지영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최 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조직국장

김봉진 민주노동당 충남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차상엽 충남대련 집행위원장

박미진 : 포럼 시작 전에 4일간 프랑스 공인 지방의원전문교육기관인 시데프(CIDEFE)에서 교육을 받았다. 무엇보다 프랑스활동가들에게서 배운 점이 많았다. 프랑스대혁명으로 쟁취한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감,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등을 확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프랑스공산당중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탄탄하게 일군 지역활동가들이 있어서 공산당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데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과 그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 내년 2010선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진보활동가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위한 훈련기관

개인적으로는 시데프라는 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다. 정책과 방법을 논하기 전에 이런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가 너무 새로웠다. 시데프가 지방의원전문교육기관인데 이런 교육기관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한국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프랑스에만 있다.

지방의원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이 프랑스에만 있다. 아, 이렇게 신기한 법이 있다니! 이 법이 1992년에 만들어지고 1994년부터 사실상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예산의 20% 한도 내에서 지방의원교육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임기가 6년중 매년 18일 정도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의원들은 프랑스내무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중에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계약을 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가 방문한 시데프는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수입의 80%라고 했다. 정부보조금이나 회비가 전혀 없다. 어떻게 22명이나 되는 상근자를 유지하는지 궁금해서 혹시 당의 지원이 있는지 물었는데, 공식적으로 정당과 분리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다. 철저히 교육프로그램 계약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데프를 만든 계기가 있다. 공산주의의원들이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의원모임을 하게 되었고, 의원협회를 만들었다. 1970년대 초에 공산당 지방의원들이 의원협회 참여를 결의했는데,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자' 의원들도 함께했다. 공산당이 후보명부를 작성할 때, 공산당에 100% 찬성하진 않아도 기본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함께 후보명부로 작성한다. 그렇게 당선된 이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공화

주의자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공산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가 함께 후보명부를 작성해서 당선되고 의원협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시데프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데프는 22명이 상근하는데, 이중 10여명이 프로그램 기획과 내용생산을 각 분야별로 담당한다. 상근자 절반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행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하고 결정한다. 시데프는 전국에 60여개 헤지옹(광역도) 지역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시데프 광역도지부장들로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3번 정도 모여서 전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제안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시데프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서로 교류하며 정보도 공유한다. 지방의원 교육뿐 아니라 교류와 공유, 즉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사실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당을 대표하는 당의 얼굴이다. 지역에 가면 각 언론사나 공무원들은 시도당위원장들보다 지방의원들을 당의 대표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어느 누구보다 당의 정책과 방침,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 쟁점이 대두됐을 때 민주노동당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시데프가 의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지만, 본질에서 공산주의자공화주의자의원그룹, 공산당주요활동가, 의원보좌관까지 모두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위한 훈련기관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보활동가로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훈련하는 기관이다. 후보자, 당선자, 보좌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사안이든, 그것이 전국적 사안이든 지역적 사안이든 어떤 담론이든 진보활동가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모아내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시데프의 역할이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선선하고 충격적이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데, 진보정당이 시데프와 같은 교육기관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고 자극이 된다.

지방의원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법은 1992년에 만들어졌지만, 시데프는 그보다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이 법을 만들기까지 공산당의원들의 엄청난 투쟁이 있었던 거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 쉽겠는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은 좋아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다. 한국 보수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적으로 본다.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이 활동을 잘하고 인정받을수록 향후 공천에서 불리하게 되고, 잠재적 경쟁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정치권을 보면 국회의원이 잠재적 경쟁자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지방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자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다른 것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반반이지 않을까 싶다. 의원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또 다른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전제하는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천적이고, 투쟁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우리는 교육기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인상적이고 재미있던 일화를 해보려고 한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꼭 파리시청에 인사를 온다고 한다. 외국 국가원수들도 엘리제궁보다 파리시청에서 프랑스대통령과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파리시청 내부에 출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시데프가 나서니 쉽게 가능하더라.

파리시는 인구 220만의 대도시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데백뜨명(도)과 코뮌(자치구)을 겸한다. 파리시 의회도 인정되고, 20개 자치구의 의회를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한국처럼 정당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의원들이 모여서 교섭단체처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파리시청을 둘러보고 파리시의회 공산주의자공화주의자그룹의 대표를 만났는데 29살의 아주 젊고 발랄한 청년이었다. 파리시의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급이라고 하는데, 파리시의회 최연소의원이 그룹의 대표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공산당에 노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한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이고 30대, 40대가 많지만 국민들에게 젊고 신선한 이미지는 아니다. 파리시 최연소의원을 보면서 민주노동당도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됐다.

그리고 인구 1629명의 농촌마을 오베흐뉴(헤지웅)내 브롱(코뮌)을 방문하면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브롱에서 시장과 노공산당원을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동네분인줄 알았다. (웃음) 시장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컵을 들고 나타나 다 따라주더라.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농담으로 한국 같으면 비서실 사람들이 직위해제됐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었다. 더 재밌는 건 시장이 너무 바빠서 가봐야 한다며,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잠시 맡긴다”고 노공산당원에게 시청 열쇠를 주었다. 처음엔 이해가 안됐다. 왜 직원들이 있는데 열쇠를 시장과 공산당원이 주고받을까?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모습과 매우 대조된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말해주었던 의원 오귀스트의 면모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지금 프랑스는 어떻게 하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2007년에 참여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는 나라 40개국을 초청해서 국제포럼을 했다고 한다. 이 공산당원이 각 나라별로 섭외하러 직접 다니는데, 어느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탑승한 한 이주민이 체포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장에게 이륙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열심히 설득했으나, 반응은 예상대로다. 그래도 이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완강히 싸웠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고, 비행기 안에서 이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인데, 의원으로서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다. 교육기간 여러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대단한 신념과 실천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참가자들은 우리의 실천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농담을 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실천적이고, 투쟁적이고, 열정적이었다.

우리에게 지역집권의 청사진, 진보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이 있는가?

우리가 방문했던 인구 1629명의 농촌마을 브롱은 70년동안 우파가 집권했다. 우리가 만난 시장이 2001년에 당선되고, 2007년에 재선됐다고 했다.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지지도에 대해 물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2001년 50%, 2007년 71%,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라고 답하더라. 우리가 만난 의원들 대개가 농담을 잘하고 아주 쾌활했다. 우리가 영구집권도 가능하겠다고 했더니,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여유 있게 대답했다. 농담처럼 답했지만 진실이 담긴 말이다. 사실 50% 지지율에서 71% 지지율로 재선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 아닌가.

프랑스에도 중앙에서 내리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있는데 중앙정부예산 20%를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쓴다고 한다. 그런데 사호코지 집권 후 부정적인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정당이 다르면 보조금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 요즘 이명박대통령도 4대강예산에 22조를 편성하면서 지역으로 내려야 할 교부금을 삭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원래 기간산업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수도권인 일드프랑스가 절반씩 재정을 부담하는데 중앙이 이걸 안지키고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

다. 그렇다면 이 조그만 농촌마을 브롱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의원의 당선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의원의 당선목적은 딱 두가지인데, 평등과 나눔의 실현이다. 평등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공공서비스의 역할로 해소하는 것이고, 나눔은 사회구조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판단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거기에 먼저 투자한다, 그렇게 의원들은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변화시키고 바꿔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만큼은 명확해 이에 근거해서 예산배정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새로 조성한 도시를 안내했는데,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에 해당. 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첫번째 생각이라고 한다. 그 옆에 있는 체육관은 4개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지었다고 했다. 매년 마을주민들의 교류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6년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지 그려볼 수 있었다.

특히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폈다고 한다. 실제로 허허벌판이었던 곳을 도시계획을 통해 인구 30%가 증가하도록 했다. 이 도시계획을 시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회, 조합 등 주민의견을 들어서 진행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주민 등의 사람들에게 우선입주권을 주면서 아주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그에 맞게 평가하고 국고보조금도 더 지급하며 장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알다시피 울산 동구와 북구는 구청장도, 구의회도 민주노동당이 모두 장악한 경험이 있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 전인 1998년부터 진보활동가가 구청장을 했다. 그런데 2006년 선거에서 동구, 북구 구청장 둘 다 한나라당에게 넘어갔다.

그렇다면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주노동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기간 민주노동당은 어떤 정책을 실현했으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받았는가를 진지하게 연구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의 문제는 그 지역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문제, 즉 민주노동당의 지역집권 청사진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울산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한 적이 없다. 브롱이랑 울산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과연 지역집권을 할 수 있고, 집권 시 운영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 과연 지역청사진을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울산뿐 아니라 여기 경기, 충남, 서울 다 있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사실 없다. 이번 정책당대회 때 민주노동당 집권전략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예전엔 2010년 집권을 목표로 하다가 2017년으로 바뀌었다. 민주노동당의 국정운영의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사실 없다. 구체적 목표가 없기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반한나라당전선과 진보세력의 조직적 성과를 내는 문제

2010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몇가지 말하려고 한다. 이번에 경기교육감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진보개혁세력' 단일후보를 추대해 당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고민은 교육감 하나 바뀐다고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다. 보궐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1년2개월이고 내년 6월에 동시선거를 한다. 1년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에다가 지역의 수많은 정치세력이 주민들을 나눠 장악하고 있다. 주민들이 교육감의 진보정책 실현에 힘을 실어 주면 좋은데, 이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진보적인 정책실현

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요즘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문제라는 고민이 참 많다.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몇가지 쟁점이 있다.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고민이나 이후 전망이 한국사회와 너무 비슷하고 시사점이 많다. 일단 프랑스는 2010년 3월에 헤지옹(광역도)선거가 있다. 우리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체장, 교육감 동시선거가 6월에 있다.

어제 계속 각 정당의 정책을 들을 때 우리 조소장님이 일관하게 질문한 게 있다. 후보전술과 좌파연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도 똑같다. 진보대연합이나 민주대연합이나, 반한나라당전선을 어디까지 구축할거냐. 내년 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최대쟁점이다.

지금 한국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세력이 분열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민사회가 각각의 후보를 냈을 경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압승하게 되고 중앙과 지역의 권력이 모두다 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등 반한나라당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의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순치 않다.

굳이 비교하면 프랑스의 사회당이 우리나라의 민주당이고, 어제 우리가 반자본주의신당과 공산당, 좌파당의 정책을 들었는데,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비슷하다. 신자유주의정책 자체를 찬성하고 추종하는 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파정권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진보진영의 성과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우리가 없는 사이 한국에서는 안희정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당 대 당 통합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좌파연합의 행로가 내년 선거의 전술상 큰 쟁점인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말해보았으면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전술과 관련된 선거연합의 범위, 방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이 좋을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 토론에 있어 근본적으로 반한나라당전선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에게 무슨 성과를 남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반한나라당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 내부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공공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에 접근하자

다음으로는 현안 쟁점이 있다. 프랑스의 쟁점은 사흐코지의 지방자치개혁법안이다. 한국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이것과 똑같다. 지방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중앙집중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한국도 이명박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행정구역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각자 자기의 이해가 물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논의가 안된다, 2012년에 논의하자”,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를 2012년에 하던 내년에 하던 간에 이미 한국에서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를 통합하겠다고 두 시장이 발표를 했다. 주민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시는 통합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다. 안산시장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통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시흥시장은 절대 안산시와 통합하지 않겠다는 반대기자회견을 했다. 안산시장은 한나라당이고 시흥시장은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이다. 한국은 지금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차치단 체간 정치적 이용수단으로, 내재적 쟁점으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를 보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프랑스는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 공산당 의원들이 가지는 믿음이 하나 있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이 형성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른 아닌 프랑스 시민의식에 대한 믿음이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의식이 있고,

그동안 지방분권이 수만번의 우여곡절과 나폴레옹시대 100년 정도 정체됐던 과정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활성화됐다, 결국 지방분권은 강화될 것”이란 자신감이다.

다만 진보진영이 사흐코지가 지방자치개혁법안을 이렇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는 솔직한 심정을 들었다. 10월 법안통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사흐코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적 효율성”을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데, 프랑스 진보적 의원들은 이 문제를 효율성이란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에는 공공서비스를 시민들 가까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철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흐코지식의 관점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이 명확했다.

한국의 행정구역개편안은 사실 노무현정권때부터 나온 말인데, 당내에서 한번도 신중하게 토론하거나 대안을 논의해본 적이 없었다. 아마 이번에는 할 것이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우리의 관점과 원칙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앞서 말했듯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 대단히 위험하다. 프랑스공산당 활동가들의 고민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하위단위로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 행정구역개편을 연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이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안을 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지방자치개혁법안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의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좋겠다.

‘민중속으로’, 주민참여민주주의와 공공서비스 확대

선거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주민참여민주주의의 확대다. 이게 프랑스공산당 지방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 여기에 공공서비스 확대를 다른 한축으로 한다.

주민참여민주주의 관련해서는 당이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중앙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주체로 세워내고 주민들 스스로 자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는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등 법과 제도는 잘 되어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민참여 없는 시민참여제도’로 되어있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을 전후해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배우자, 브라질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한참 말하다가 이제 속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을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앞서 말했던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투쟁했던 오귀스트(Auguste)가 헤지옹(광역도)인 호날프(Rhône-Alpes)의 부도지사(부의장)다. 오귀스트의원은 2004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오귀스트의원은 또 그 시의 주민참여민주주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기구를 내오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의회 설득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우파, 좌파 다 소극적이었는데 사회당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우파들은 주민참여민주주의 이야길 하면 대의 기관인 의회가 할 일을 왜 주민에게 하도록 하느냐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회당, 녹색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기분 나쁘다는 식이다. “시민의식을 믿을 수 없다,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지방자치제도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와 참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학교급식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주민발의를 했다. 주민들의 서명을 직접

받으면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할 때 의원들이 다 기분나빠했다. “아니, 박미진 당신도 의원이면서 의원의 입법발의권한을 포기하고 주민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부터 “의원을 못 믿고 주민들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등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어쨌든 6개월동안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첫 사업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 초대하는 편지를 데빡뜨명(도)의 전체 도민 260만명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성사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1000여개의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조직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분야별로 진행되는 토론회, 즉 경제발전분야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바로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함께 상상하자!”는 슬로건을 많이 강조했다고 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오귀스트를 비롯한 프랑스의 진보의원들은 “왕도는 없다, 철저히 민중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늘 민중의 곁에 있어야 한다, 먼저 실천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프랑스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데 굉장히 인색한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겸손에 대한 말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 그들이 말한 겸손이란 말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거나 우리역량이 있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늘 겸손하면서 무엇보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 실천을 강조한 의미였다. 또한 철저히 민중속으로 들어가 시민을 주체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말을 하게 만들고, 그 말을 경청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방법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진보적 성장을 위한 국제연대

마지막으로 안타까웠던 지점을 말하지 안할 수 없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 단체장이고, 주요 의원들이었는데 우리는 민주노동당 공식 대표단은 아니었다. 개별 관심 있는 당원들이 참여한 것인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우리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격을 높여서 최상의 대우를 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됐던 것은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의 필요성이었다.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가는 곳마다 형성되어 있다. 시테프리는 교육기관에 외국인이 와서 교육을 받은 것도 우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브라질 등 외국에서도 요청이 많았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의 진보를 위해 먼 곳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활동가들은 한국이 처음이고, 그 열정에 감동 받았다고 여러번 말했다.

시테프리는 교육기관의 운영모델을 민주노동당이 많이 배워야 한다. 프랑스의 진보적인 의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원칙과 신념, 그리고 수많은 정책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때부터 프랑스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정책이나 논의과정을 보면 상호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양쪽의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제안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정말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 모두 민주노동당 당원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식적인 대표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 시테프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회와 함께 토론할 주제를 몇가지 짚어 보았다. 누구든 편안하게 말하면 되겠다.

진보대연합을 기본으로 진보진영의 성장에 기여하는 민주대연합 실현해야

황희준 : 사회자가 2010년 지방선거관련해서 몇가지 주제를 밝혔다. 나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간부가 아니라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원이기 때문에, 이 주제들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어제 프랑스 진보정당들의 정책을 들으면서 내년의 선거쟁점이 되는 선거연합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들었다. 한국에서도 진보대연합이나 민주대연합이나가 쟁점인데, 내가 사는 동네인 구로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부족하지만 개인적 의견을 말하려 한다.

구로구에는 6개 기초의원선거구가 모두 중대선거구다. 당에서는 구의원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낼 것 같고, 분당의 후과도 있어서 시의원과 구청장 출마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민주당은 차지하고서라도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같은 선거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6년에 그랬다. 2개 선거구에서 시민단체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가 같이 나왔는데 둘 다 떨어지고, 3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2인, 민주당이 1인 당선됐다.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한 것은 잘못이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게 필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 될지 논의해야겠지만, 이런 평가가 반영될 것 같다.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진보대연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이에서 선거구별로 겹치지 않게 후보를 내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그런데 또 여기서 걸리는 문제는 민주당과의 관계문제다. 구청장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구의원 같은 경우 진보대연합을 통해서 후보를 내고 다시 민주당과 경선을 해서 1명의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과 경쟁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구청장은 현재 한나라당소속이고,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데 그렇다면 진보개혁후보까지 3자구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이 미우니깐 민주당이 성에 안차지만 민주당에 힘을 모아줄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던 이인영 전의원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함께 선거준비를 하자는 이야길 한다. 이를 테면 “구청장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일정정도 구의원선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진보, 개혁, 수구의 3자구도로 갈 것인가, 진보개혁세력에서 후보를 낼 것인가, 아니면 당선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건가? 만약 구청장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따낼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차피 전략적으로 진보신당과 시민단체는 제2의 통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양보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따낼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원칙을 정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떠한 후보전술을 구사할 것인가’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다. 중앙에서 잘 협의해서 선거연합을 이룬다면 지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중앙이 그렇지 않으면 지역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정리하면 진보대연합은 구의원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것 같다. 민주대연합의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는 중앙의 역할이 크다. 지역에서는 일단 구청장을 안 낼 가능성이 높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할지 아니면 그냥 투표만 할지. 어쨌든 민주당과의 연합문제는 다양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목표는 1명의 구의원이라도 당선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성 : 서울 강남구에서 활동한다. 강남구의 경우는 민주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런 세력이 다 힘을 합쳐도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당선시키기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

이 다 같이 대응해도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민주당연합이든 진보대연합이든 이에 관한 논의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로구 같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강남구 같은 지역이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지역별로 실정과 조건이 다른 지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장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시에서 민주노동당 고정지지가 7~10% 정도 있는데, 이전 선거에서 2~3% 지지를 받았다. 당의 재정과 조직 등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반면 당이니깐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어찌됐든 진보진영이 성과를 내야 하는 측면으로 고민이 많다.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무원노조와의 사업이 중요하다

지영철 : 프랑스의 지방자치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프랑스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의원은 기획과 집행을 동시에 한다. 의회의 의장이 곧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하고, 기획과 집행의 역할은 아니다. 아까 김상곤경기교육감 사례에도 나왔던 것처럼,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 프랑스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의 역할, 집행과 기획의 역할까지 하면서 마을을 움직이고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한계가 있다. 주민직선으로 뽑히는 교육감이나 단체장의 역할도 한계가 있는 거 같다.

이런 지점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당선된 다음에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집권 했을 때 실제 공무원들이 우리의 청사진, 전망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허수아비 지자체장,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힘을 발휘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강조해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박미진 : 지역선거, 후보 관련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들 알겠지만 지역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 편차가 심해서 일반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 최대고민은 2010년 지방선거출마자의 문제, 후보결의자 기근의 문제다. 저는 안산에 사는데 안산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선거구에 다 민주노동당 후보자가 출마했다. 당의 모든 물질, 인적 역량을 총동원해 치른 선거였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후과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년 선거출마자 기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총선 때도 후보발굴이 굉장히 어려웠다. 출마를 결의했던 분들도 분당이 벌어지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출마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한다. 이런 내부 주체역량의 조건을 다 알 거다.

김봉진 : 일단 노동현장에서 드는 고민은 출마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대한 투표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우리 후보가 없으면 선거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싶다. 어찌됐든 우리 후보 없이 선거가 진행된다면, 이후 다시 선거운동을 하게 될 때 정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 후보 없이 선거가 진행된다면, 그 이후 선거 때까지 유권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연합, 진보대연합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많이 출마하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논의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선도 총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주민들 가까이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듣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겠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미진 : 당사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죠? (웃음) 언제라도 조직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없으면 어렵다. 지금 말한 것은 당의 쟁점이기도 하다. 2010년 선거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후보의 출마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가능한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당선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모적으로 논쟁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보다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당활동가들 스스로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대중조직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정치활동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대중조직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이들이 정치활동영역으로 나와서 활동해야만 당이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대중적 기반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웃음)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을 거다.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많이 하면서 고생스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학생동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일상적 지역정치활동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실천

차상엽 : 사실 지난 기간 지방선거 준비나 토론 과정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밝히기가 조심스럽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부족하나마 말하겠다.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지방선거에 대한 경험들을 체득하고 있는데, 나는 프랑스활동가들이 가진 프랑스국민의식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접하며 사업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때만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사업을 잘하면 당선이 될 것이고, 우리가 펼쳐나갈 정책이 일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당선 후의 청사진도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당활동에서 이것이 발상의 전환으로 다가온다. 후보를 많이 출마시키는 것도 좋고, 정책개발도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함께해 줄 주민들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다. 대학사회도 사실 그게 고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똑바른 소리를 해도 학우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다들 잘 알고, 입버릇처럼 하는 말 이면서도 실제 지역사회나 대학사회에서 진보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없다.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 사업과 투쟁사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박미진: 핵심을 말하였다. 정책당대회 때도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것이 지역정치활동의 문제다. 우리는 “민중속으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당의 가장 하부단위로부터 지역정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진단되어야 하는데, 당의 지역정치활동 자체가 없다는 평가를 듣는다. 중앙당의 지침, 중앙이슈에 대응하고 선전전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정치활동은 없다는 게 당의 지방자치현황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은 지역위원회 강화와 시도당 역량 보강을 위해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중앙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물적, 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 중앙이 잘하면 지역이 더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니 중앙이 전면적으로 쇄신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많은 데 사실 마음처럼 안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고민이다. 최근 당 최고위원회 분석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 언론노출빈도가 3분의 1로 줄었다. 5명의 의석임에도 더 열심히 일했지만 언론노출빈도가 적다는 분석을 하는데 당이 고민이 많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자신감과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프

랑스공산당이 1921년 창당했으니까 지금까지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100년동안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은 우리와 비슷한 7%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 기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나. 그런데도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한국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10년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우리도 여러번의 위기를 넘겼는데, 분당 위기 한번으로 인해 당이 전례 없이 침체되고 위축됐다. 민주노동당이 정말 대안인가 하는 근원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신념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활동가들을 보면서,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데 10년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우리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으로 인정받는 선거로 되어야 한다

황희준 : 선거운동의 경험이 많진 않다. 다만 선거는 단순해야 한다는 게 2006년 지방선거를 하면서 느낀 거다. 물론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중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중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명박 심판!”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2010년 헤지옹선거가 사흐코지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프랑스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강해서 그런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내년 선거가 이명박정권의 중간평가라고 말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같은 큰 지역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잘 알겠지만 2006년 지방선거도 노무현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으며, 서울에서 민주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 선거에서 하나도 당선되지 못했다. 다 한나라당이 됐다. 물론 구의원은 지역일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좀 달랐지만, 구청장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번도 안한 후보가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선이 된 사례도 있더라.

그렇다면 2010년 지방선거는 대외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중간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여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이명박을 정말 싫어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기엔 지난 10년을 보면 미답지 않고, 진보정당은 잘할 것 같은데 분당되고 서로 잘났다며 싸우는 것으로 인식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명박이 싫는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내년 선거를 통해 이명박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첫째로 이명박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잘하는 것, 둘째는 연대연합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연합의 문제는 진보대연합을 기본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실정과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정치대안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당 자체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상을 보여줄 수 있는 내적 준비인 거다. 우리가 당선이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정책이 많지 않다. 지역의 현안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쟁점화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건 아까 나온대로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이번 지방선거는 당 내적으로는 지역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선거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의 답은 있어야겠지만, 선거 때 이것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쟁점은 피하고 이명박을 심판하는 선거로 부각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흐름을 가지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가치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지방정책

백미진 : 지역집권청사진과 관련된 의견이 나오는 데, 정책과 관련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활동가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의 하나가 공공주택 건설과 확보였다. 파리 인구가 220만명인데 갈수록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도 서울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각하다. 파리시의회 공산주의자공화주의자 그룹은 파리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 2014년까지 20%를 공공주택으로, 우리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1년에 1만개 정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형태로 될 것인데, 파리뿐 아니라 전지역적으로 주택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정책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임대주택을 평수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 임대주택의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여론도 적지 않다. 프랑스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지역의 빈부격차에 대한 구애 없이 모든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었다.

파리에서 또 하나 핵심은 물이었다. 한국은 상수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유화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물이 사유화되어 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물값이 비싸다.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이 이윤을 너무 많이 창출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지만,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본질적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윤을 남기는 장사로 전락시키는 것은 가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곳 활동가들의 논리였다. 상수도를 정부가 다시 회수해 공영화하는 것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파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물을 다시 공영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주택과 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 우리로 보면 경기도인 일드프랑스는 파리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가장 많이 추진한 것이 대중교통요금 관련한 부분이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학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실현했고,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이 많았다. 우리 기준으로 직업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금을 많이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

더욱 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로

최민 :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중요하게 많이 하였으니 나는 행정구역개편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주목해야 한다. 얼마 전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더라. 전국적으로 47개 지역이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공주와 부여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 통합하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서 통합논의가 더 빨라지게 된 것 같다.

계속 거론됐지만 이명박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은 사호코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0월에 추진되는데 지금 이명박이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도 굉장히 빨리 밀어붙일 것 같다. 물론 이명박뿐만 아니라 이전에 노무현도 프랑스를 주목했다. 정부가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였고, 여기서 주목한 제도가 분권형대통령제였다. 노무현이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 주장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를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프랑스의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한발 앞선 것은 분명하다. 그 한발 나아간 제도를 사호코지의 지방자치 개혁방안이 한국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행정구역개편안은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한발 더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낸 법안들이 있다. 5개 정도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 민주당이 발의한 것,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것이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분권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의 예를 들면 예전에 행정복합도시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분권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었지만 명확한 입장은 사실 없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할 텐데. 일단 노무현정부가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했을 때보다는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행정구역개편안 관련한 법안들이 분권의 방향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내세워야 할 것은 더욱 더 지방분권화 하는 방향, 그리고 주민참여가 더욱 더 보장된 방향으로 나가는 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늦었다. 민주노동당의 안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에서 중요한 모델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관련해 교육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안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정국 흐름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미진 : 오늘 이 시간은 4일간의 시테프교육과정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부담 없이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프랑스의 상황과 비교해 내년 후보전술에서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문제, 현안쟁점에서의 행정구역개편문제, 주민참여민주주의의 확대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더불어 여기 참여한 활동가들이 이후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여러가지 내용, 알게 된 시사점들을 한국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용을 생산하는 역할을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수고하였다. <끝>